

“스타트업 초기, 속도가 중요...규제가 발목 잡아”

최승재 음부즈만 간담회서 광주 스타트업 애로 제기 실증·정부지원·규제샌드박스 등 현실 문제 해소 촉구

“사업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한데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역 스타트업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샌드박스와 연구개발(R&D) 지원, 인준 제도 등이 현장에서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서 창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구체적으로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음부즈만(차관급)이 참석해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과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며 ‘현장 체감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

먼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를 개발하는 ㈜세이앤이 윤신오 대표는 PoC(실증)과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애로를 제기했

다. 윤신오 대표는 “개발한 장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증 과정이 필수적인데,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준비 부담이 커 사업화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기업이 빠르게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세르보테크 안병곤 대표는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안병곤 대표는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은 설비, 시제품, 인준, 판로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현재 지원사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텐트너 남원욱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원욱 대표는 “신기술 서비스는 빠르게 실증하고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규제샌드박스는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실증기간 역시 충분히 짧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실제 창업기업에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음부즈만이 지역 청년 창업기업 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도움이 되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별로 제기된 문제는 업종과 분야는 달랐지만 ‘속도’와 ‘접근성’ 문제로 귀결됐다.

PoC 실증, 정부지원사업,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창업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요건,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

는 취지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검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제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PoC·시제품 실증 절차 개선, 창업기업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확대,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실증기간 확대 등의 필요성이 한 목소리로 제시

됐다. 최승재 음부즈만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는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창업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술 기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기부 공공기관 평가서 전력거래소 ‘최우수’ 영예

전력거래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총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거래소는 44개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해왔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과의 신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의 홍보지원과 중등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다각화 노력도 이어졌다.

주요 추진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마켓 신규 도입을 통한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 안전경영 전담조직 격상 및 지원체계 강화,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확대(9개사, 7억원 조정), 2024년 대비 45억원 증가한 상생결제액 확대(228억원) 등이다. 나주=조희찬 기자 pose007@

상습체불 사업주, 정부 지원사업 참여 못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체불임금 청산 유도 등 기대 체불임금 회수 강제징수 가능...기간 단축·회수율 제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아 온 사업자들이 고용축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축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

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 확대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지역에 한정된 고용 위기 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이밖에도 이날 심의·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

가능해졌다. 그간 체불 피해 발생 시 국가가 피해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했고,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했다.

또 법원 확정 판결 후에 변제금을 수납하기까지 평균 290일로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제금 징수 과정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만 받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회수 기간도 약 158일로 기존보다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대차자금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f104@gwangnam.co.kr

한전, 미국 에너지기업 PSEG와 송전망 계약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너지 신사업 확장 발판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에너지기업과 손잡고 초고압 송전망 사업에 진출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28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PSEG와 765kV 초고압 송전망 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보유한 765kV급 초고압 송전망의 설계·조달·시공(EPC) 역량과 계통 운영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장거리·대용량 송전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은 단순 기술 자문을 넘어 사업개발과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

락을 확대한다. 지분투자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며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과 ‘팀 코리아(Team Korea)’ 체계를 구축해 동반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PSEG 관계자는 “한전은 초고압 송전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파트너”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한



한전의 765kV EPC 및 운영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사업을 교두보로 지능형 디지털발전소(IDPP),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등 에너지 신 기술을 활용한 미국 내 사업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찾아보기 쉽게 생활보험
의 품호 남구

남구민이라면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6 남구민 안전보험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중복 보장 YES

보험기간
2026. 3. 31. ~ 2027. 3. 30. (1년)

보험료
전액무료 (남구 전액부담)

보장대상
* 전입,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지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금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남구청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재난안전 > 구민안전보험에서 청구서 양식 등 다운 가능

문의처
보험고객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장항목 사고 발생지역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보장금액 지급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전세버스 포함,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상해 사고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만 담보)	10만원
	상해로 화상(상재상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기타문의: 남구청 안전총괄과 062-607-2956

광주광역시 남구